

與 蔣 隆 ‘대권행보’ 지속... 核무장론·4년 중임제·尹 승복 강조

吳, 美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도 “협상카드로 조건부 핵 무장 필요”
韓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해야”
안철수 “메시지로 유혈사태 방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의 장외투쟁 기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 재판소 앞에서 24시간씩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에서 기대하는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도 여권 잠룡들은 대중에게 아젠다를 던지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조

건부 핵 무장이 협상카드로 필요하다면 서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 행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

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기존연설을 하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한미동맹 균열, 대북관계 악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응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로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압박에 대구 북콘서트를 순연한 한 전 대표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고 약속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

요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 아젠다도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 높은 나라다. 대단한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나라에선 규제를 완화해서 크립토크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현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尹 석방’에 전열 가다듬기

李, 비명계 인사 만나 ‘내란종식’ 한목소리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조기대선 기류에 당내갈등 분위기서
단일대오로 뭉쳐 갈등봉합 시도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 민주당 ‘내란 종식’을 고리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내 노선투쟁을 하는 분위기였으나,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경북 구역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비주류 인사들을 만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이재명 때리기’ 전력이 본격화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이 짜고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필요했다. 이에 이 대표와 비명계 대표자들이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해) 적절하게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판 킬링필드(1960~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인이나라 최고의 합의인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는 기본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모인 비명계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내란 극복과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자가 개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행진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4일차인 김경수 전 지사는 “탄핵으로 반드시 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들에 국민인권을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가 현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총장도 “불법 계엄 이후 한 국주식시장에서 250조원이 날아갔다. 한

울도 100원 이상 올랐고 이를 방어하느라 외환보유고도 줄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국민이 가진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하는 힘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경북 구역 인근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로 행진에 나섰다. 매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8.7km 거리를 걸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방침이다. 14일에는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법사위, 심우정·박세현 현안질의 증인 채택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尹 구속취소’에 출석 요구했지만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결국 법사위는 오는 19일 두 사람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을 향해 “윤석열은 (구속기간에 대해)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대검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전날(11일)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안질의에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다. 하지만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오는 19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

다자녀 학자금 지원, 둘째 자녀로 확대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만나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국가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탈피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버티면서 청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해서 맘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에 더해 청년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년들의 등록금, 주거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평균 용돈과 생활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복지 처우 개선 ▲등록금 인상 과정의 민주화 ▲월세·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대학원생 주거 처우 강화 ▲헬스 바우처 지급 등 학생 건강권 강화 ▲대학원생 지원 강화 ▲예술대학교 작품 제작 지원비 강화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박태홍 기자